

한국 국민의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 변화에 대한 연구

우정엽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성원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과 미국은 6·25 전쟁 이후 맺은 동맹을 기초로 60년이 넘게 우호 관계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한미 동맹 역사 속에는 늘 크고 작은 위기가 존재해 왔다. 이 논문은 한미동맹의 위기가 어디 서부터 초래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수많은 요인이 존재하겠지만 이 논문은 동맹에 대한 대중의 집단적 정서형성과 동맹 지지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집중한다. 과거와 달리 대중 여론이 국내 정치와 국제관계에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실제로 대중 지지도가 한미동맹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국 대중들이 한미동맹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 인식이 어떻게 동맹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각 시기별로 이루어졌던 여론조사, 한미동맹과 관련한 이슈가 임박한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도와 국내정치 간의 상관관계이다. 동맹에 대한 지지도는 국내정치 분위기와 매우 깊은 연관 관계가 있다.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도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기존의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세대 간의 지지도 차이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세대 간의 차이 외에 이슈의 성격이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임을 본 논문에서 주장한다. 이슈에 따른 지지도의 변화가 중요하므로 미래에 어떤 이슈가 동맹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미칠지도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한미동맹, 안보, 반미정서, 통일, 주한미군

I. 들어가는 말

한국과 미국은 6·25 전쟁 이후 맺은 동맹을 기초로 그 우호 관계를 지속해 왔다. 지난 2013년은 한미동맹이 60주년을 맞이한 의미 깊은 해였으며 한미 양국은 동맹 관계의 성공적인 지속을 기념하였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역사 속에는 늘 크고 작은 위기가 존재해 왔고 최근 보수 성향의 정부가 두 정권을 거쳐 집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중국 경사론’까지 나돌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급속히 냉각된 한일 관계로 인하여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이전과 같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 논문은 한미동맹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초래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의 변화를 세대 간의 지지도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수많은 요인이 존재하겠지만 이 논문은 동맹에 대한 대중의 집단적 정서형성과 동맹 지지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집중한다. 과거와 달리 대중 여론이 국내 정치와 국제관계에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실제로 대중 지지도가 한미동맹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국 대중들이 한미동맹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 인식이 어떻게 동맹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각 시기별로 이루어졌던 여론조사, 한미동맹과 관련한 이슈가 임박한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다.

2015년 5월 미하원대표단의 방문으로 이루어진 청와대 접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대응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한미 동맹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¹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오바마 정부와 이어온 정상회담과 양국의 지도부 사이의 지속적인 우

호관계가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데 뜻을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로 양국이 우호관계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양국의 국민 여론도 한미동맹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보여왔다. 2013년 진행된 한미동맹에 관한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나이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90%의 여론조사 응답자들이 “한미동맹이 미래에도 필요하다”고 답했다.²

동맹에 관한 대중의 태도는 미국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2012년 시카고 카운슬에서 조사한 한미동맹에 관한 미국인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한 대중 지지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군 국방비 지출과 해외 주둔군 유지에 관한 미국 내 대중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한 미국 내 대중 지지도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응답자의 60%는 미군의 한국 장기 주둔을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 이것은 미국의 오래된 동맹국인 독일과 일본(지지율 51%) 그리고 호주(지지율 40%)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다(Chicago Council, 2012). 많은 한국인들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으로 인해 한미동맹 유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대중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거 2008년 미국으로부터의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장기간의 대규모 시위가 보여주듯, 표면적으로는 강해 보이는 한미동맹이 특정 사건을 통해 순식간 약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치 사회의 제반 조건으로만 보면 양국의 유대관계가 최고조에서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맹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지도는 언제든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정서가 한미동맹의 지지도의 약화로 해석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미정서가 동맹 지지도 약화의 주요한 원인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책결정자가 대외정책을 수행하면서 국민여

-
1. 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srh%5Bpage%5D=7&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10899(검색일: 2015년 5월 29일).
 2. 아산정책연구원 “아산 데일리 폴 2013”, 미발간 자료(조사기간: 2013년 9월 5~7일).
 3. 아산정책연구원 “아산 연간 조사 2013”, 미발간 자료(조사기간: 2013년 9월 4~27일).

론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여론만을 좇아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해서는 안 되지만, 국민들이 특정 국가나 정책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때 정치적 압력을 느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특정 유형의 대외 정책에 국민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정책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논문은 무엇이 국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 정서 형성을 야기하는 잠재적 위협인지 분석하기 위해 한미동맹에 대한 대중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각 요인은 어떤 의미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동시에 동맹을 약화시키는 이유와 방법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이념적인 반미정서와 특정 인구학적 요인 사이에는 연관 관계가 있다는 사회적 통념이 있다. 다시 말해, 이념적으로 반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한미동맹에 약한 지지도를 보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실제로 최근 정치 역사를 보면 반미정서가 팽배해질수록 미군주둔과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치 역사를 보면 반미정서의 중심에 젊은 세대가 있으며, 2002년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실제로 젊은 세대의 반미정서가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은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의견이다. 2002년 미군 장갑차 훈련 중 사망한 여중생을 위한 촛불 시위나 2008년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대규모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반드시 진보적이거나 반미정서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시위 참여자 중에서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사람들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시위에 참여한 사람과 다른 참여 동기를 갖고 있다. 그들의 반미 시위 참여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느끼는 감정과 연민에 의한 것일 뿐 이념적 성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 번째로,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는 주요한 요인이 아닐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갈등과 남남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다. 그것은 미래의 한미동맹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만약 우리가 한미동맹의 역할을 남한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역할을 제한 한다면,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동맹의 필요성이 약화될 것이다. 그러므

로 국민들이 통일이 성취된 이후의 한미동맹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II. 기존 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한미동맹과 국내 지지도에 관한 선행 연구는 많이 존재한다. 흥미로운 것은 기존 연구들이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한미동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문제의 초점으로 두고 있으며 미국을 대신할 안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김우상, 2004). 또한 연구 방법으로 특정 시기에 두드러지는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도 변화를 정치 이념 간 또는 세대 간 차이에 집중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도가 정치 이념에 따라 또는 세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또한 시기별로 한미동맹의 공고화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일반적인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이내영·정한울, 2003; 박경미 외, 2012). 하지만 기존 연구들이 한미동맹에 지지도와 정치 이념 또는 세대와 같은 인구학적 요소 간의 상관관계에 지나치게 비중을 둬으로써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도 변화를 표면적으로 진단할 뿐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인구학적 요인과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도의 상관관계를 불가변한 변수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존 연구들이 정치 이념 또는 세대별로 차이를 보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도를 고착화된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에 문제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연구 방법 또한 특정 시기에 한미동맹에 지지도를 정치 이념과 세대별로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유사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방법이 유사할지라도 본 연구가 목표하는 바는 기존 연구들과 명확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정치이념 또는 세대

별로 정형화되어 있던 사회 집단의 공유된 인식이 다분화되었고, 인구학적 변수로 설명되지 못하는 다양한 다이나믹스가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고 전제한다(조정인, 2011). 이와 같은 전제 아래 지난 십여 년간 한국에서 일어난 반미여론과 대규모 시위 그리고 한미동맹에 지지 정도 변화의 본질적 원인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본 연구가 선행 연구와 차별화되는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를 통해 한미동맹의 지지도는 인구학적 요소와의 연관성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고, 단발적이고 집단적인 감정적 요인에 의해 지지도가 변동을 거듭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세대별로 정형화 되어 있던 정치 성향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미동맹의 지지도는 관리가 가능한 현상이며,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함께 노력해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연구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논문이 다루지 않는 것을 명확히 하겠다. 저자는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요인이 완벽하게 한미동맹 지지도 변화를 설명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여전히 이념 성향이 한국 정치에서 특별히 대북한 정책과 미국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저자가 이 논문을 통해 조명하고 싶은 것은 이념의 중요성과 이념과 인구학적 요소의 연관성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또한 어떠한 비용이 들더라도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한국 대중이 미국을 대신할 안보 제공자를 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동맹은 우리 대외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며 대외정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시기에 도달하면 동맹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지지 정도를 결정짓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III. 반미정서와 한미동맹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한미동맹은 진보 정권의 집권 기간 동안 순탄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특별히 노무현 정권 때에 한미동맹은 역사상 유례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된다. 스콧 스나이더는 한미동맹은 양국 모두에서 냉전시대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지적했고, 데이비드 강 역시 2002년의 위기가 양 국가가 대외정책과 개념 인식에 있어서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Snyder, 2004; Kang, 2004). 역대 주한 대사 중 가장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도날드 그렉 대사 역시 “2004년은 한미동맹의 역사상 최저점”이었다고 증언했다.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한미동맹에 대한 대중 지지도를 약화시켰는지 파악하기 위해 그 시기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미 시위가 과격화되었을 당시 대중들이 무엇을 느끼고 그들 사이에 어떤 정치적 정서가 형성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2015년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어떠한 잠재적 위협에 직면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저자는 한미동맹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높게 나왔을지라도 한국 내 반미정서가 한미동맹 지지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와 같은 반미정서가 왜 한국정치에 깊게 뿌리 내렸는지 나아가 어떻게 반미정서가 한미동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의논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반미정서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 논문은 반미정서와 관련된 2000년대 이후의 정치 역사와 대외정책에 그 초점을 둘 것이다. 한 가지 중요하게 의논되어야 할 문제는 젊은 세대가 반미정서의 중심에 있게 되면서 십 년 전에 비해 이념적 성향과 인구학적 요인(나이) 간의 관계가 바뀌었냐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집권 당시, 표면적으로 한미동맹 관계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맹을 환영했고, 미국을 공식 방문하였고, 미군주둔지를 방문하였으며 무엇보다 국내 정치적 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청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한미동맹이 어려움을 겪었던 주된 원인은 한국과 미국 정치 엘리트들이 양국에 무엇이 근본적인 안보위협인지에 대해 상이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2년 야당의 대선 승리와 두 명의 여중생이 미군전차에 압사당한 사건으로 팽배해진 반미정서로 인해 대중들은 당시의 정치 엘리트들과 한국

4. <http://www.newsweek.com/kim-jong-il-truth-behind-caricature-140251>(검색일: 2013년 1월 23일).

안보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2003년 1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2%의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한국 안보에 제일 큰 위협이라고 답한 반면 39%는 미국을 한국 안보에 제일 큰 위협으로 꼽았다.⁵ 미국 입장에서는 노무현 정권 집권기간 동안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해체시키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한국과 미국이 일치된 대북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이 실현 가능한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에 개입해 주기를 권고하였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불량 국가로 간주하고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던 반면, 한국 정부와 대중은 같은 기간 동안 북한을 혈족으로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단일 국가가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의 반미정서는 주한미군, 군사지휘권, 주둔군지위협정 지지에 관한 이슈들에서 촉발되었고, 이는 미국 내에서 널리 알려졌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반미정서에 관한 소식을 보도하면서 미국 정치 엘리트들의 한미동맹 지지도는 현격히 낮아졌다. 이와 같은 한미동맹의 퇴화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일정한 수준의 반미정서가 한국에서 존재했고, 반미주의자들과 일부 학생들이 이러한 정서를 주도적으로 이용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도 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한미동맹의 퇴화가 일어날지는 예상치 못했다.

그렇다면 당시 한국 정치 지도자들이 왜 북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는지 질문해 봐야 한다. 남북한 간의 동등하던 경제력은 1970년대 이후 그 격차가 벌어졌다. 남한의 경제는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으며, 몇 번의 경제 위기에도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냈다. 눈부신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한국은 국내 총생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늘어나는 국방비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커져가는 경제적 격차로 인해 남한은 북한에 대한 두려움이 급격히 사라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펼쳤고, 이후 이뤄진 정상회담으로 인해 대중들은 남북한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확고히 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한국 정부는 북한 위협의 의도와 능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당시 정치 엘리트들은 오히려 북한이 코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47&aid=0000041854>(검색일: 2013년 2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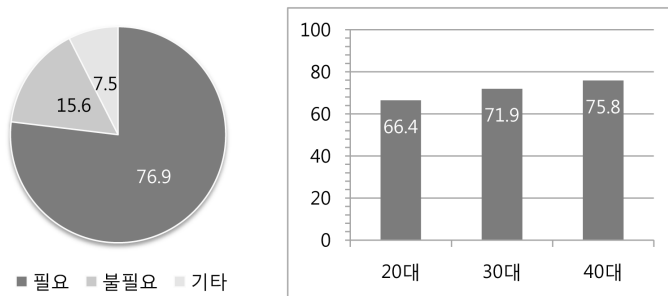
관심을 기울였다. 386세대라 일컫는 젊은 정치 엘리트와 정치적으로 동원된 대중은 한국에서의 위기는 북한과 제국주의적인 미국 간의 갈등에서 초래된다고 믿었다. 이것이 당시 대중들이 한반도에 가장 큰 안보 위협이 북한이 아닌 미국이라고 믿었던 이유이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북한 안보위협에 대한 상이한 인식 차이가 존재했고 아울러 한반도 핵 비확산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의견에도 큰 인식 차가 있었다. 한반도 핵 비확산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이었지만, 좌파적 성향을 지닌 한국 정치 엘리트와 대중은 핵무장을 북한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있는 듯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는 이유가 미국과 협상에서 외교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 뒤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 그들은 남한이 북한의 재래식 포 공격에 의해 쉽게 파괴될 것이라 믿기 때문에 북한이 정말 남한을 공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핵무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쉽게 결론 내렸다. 두 번째 이유는 더욱 순진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한민족인 남한에게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매우 최근까지도, 한국의 전문가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40대 이전과 40대 이후의 세대가 양분되는 것을 목격했다. 정치 주류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면서 민주화를 경험한 젊은 세대들이 반미정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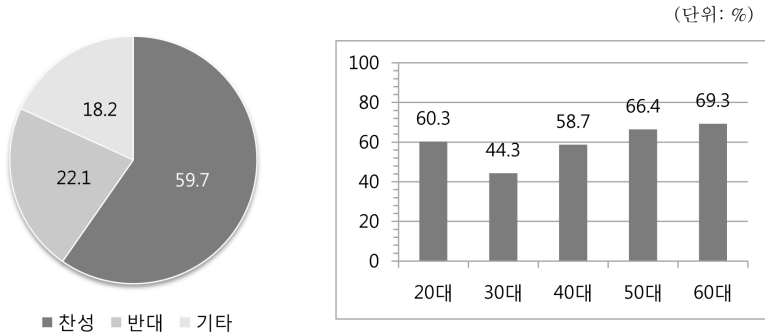
대체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진보적 성향을 지녔고,

(단위: %)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아산 연간 조사 2013” 미발간 자료.

〈그림 1〉 주한미군은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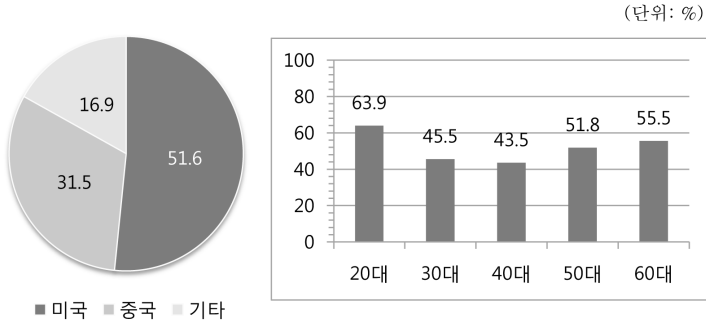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아산 연간 조사 2013” 미발간 자료.

〈그림 2〉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안보유지 역할

이에 따라 반미정서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20대가 30~40대와는 다른 성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는 매우 복잡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어떤 문항에 더 동의하는지 물었을 때, 76.9%의 한국 사람들이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15.6%가 주한미군은 필요 없을 뿐더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응답했다. 예상하였듯이, 대체적으로 젊은 세대가 후자의 기성세대가 전자의 문항을 선택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66.4%, 30대의 71.9%, 그리고 40대의 75.8%가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대가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20대에게는 다른 문항의 설문지가 부여되었다.

미국이 한국에 안보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한반도의 위기를 야기시키는지 두 가지 문항에서, 59.7%의 응답자가 전자를 22.1%의 응답자가 후자를 선택했다. 30대의 44.3%가 미국이 한국에 안보를 제공한다고 답한 반면 60.3%의 20대가 미국이 한국에 안보를 제공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수치는 40대의 58.7%, 50대의 66.4% 그리고 60대의 69.3%와 비교하여 볼 때 꽤 높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항과 중국과 관계를 강화해야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아산 연간 조사 2013” 미발간 자료.

〈그림 3〉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동맹 선호도

한다는 문항 사이에서는 51.6%의 응답자가 미국을 선택했고 31.5%가 중국을 선택했다. 50대의 51.8%와 60대의 55.5%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63.9%의 20대가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30대는 45.5%, 40대는 43.5%의 응답자만이 이 문항에 동의했다. 결론적으로, 30대와 40대는 그들의 윗세대와 다르게 미국과 관련한 문항에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로지 안보에만 국한된 사안에 직면했을 때에는 20대는 50대 또는 60대와 비슷하게 응답하는 성향을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사안에는 20대는 다른 세대보다 더 극렬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향이 많은 20대가 “주한미군”과 “사회 문제”에 관련된 문항에 반응하는 이유일 것이다.⁶

IV. 대규모 시위와 비극적 참사

한국에 진보 정권이 집권할 때만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에 들어서자마자 2008년 초에 일어났던 미국 소고기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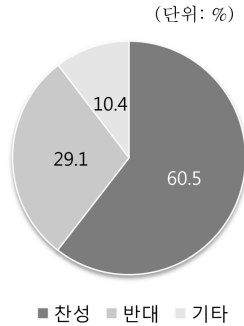
6. 아산정책연구원 “아산 연간 조사 2013”, 미발간 자료(조사기간: 2013년 9월 4-27일).

반대 시위는 분석이 필요한 사건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을 한미동맹 관계의 절정의 시기로 여겼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원래 제자리로 회복시켜 놓는 것이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수행할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수정권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오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8년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이다. 시위가 비록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되었지만 이것은 곧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형태의 반미시위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한미동맹의 회복이 구체적으로 미국 소고기 수입 허가라는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증폭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포함하여, 한국 정치 역사를 보면 두 번의 대규모 반미 시위를 찾아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2002년 군사 훈련 중 미군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두 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이어진 촛불 시위이다. 전문가들은 이 반미시위가 규모뿐 아니라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구성이 일반적 시위와 달랐기 때문에 많이 놀랐다. 많은 전문가들은 반미시위가 이념적으로 좌파적 성향의 학생들이나 정치적으로 동원된 진보주의자들에 의해서 계획되고 실행되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당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전의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과는 많이 달랐다. 언급한 두 가지 시위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 전에 어떤 정치적 이벤트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는 일반 시민이었다. 김성한(2003)은 이들을 이념집단 또는 실용주의 집단과 구별하며 포퓰리스트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형적인 이념집단이 좌파적 성향의 지식인, 학생 그리고 진보적 정치인들로 구성된 것과 다르게 포퓰리스트 그룹은 감정적으로 결집되어 시위에 참여한다. 김성한 교수에 따르면 실용주의 집단은 대체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미군에 의한 범죄, 책임분담, 환경 문제, 작전지휘권 문제와 같은 사안에 특정한 목적을 갖는 비정부 기관이다. 김지웅(1989) 교수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반미 정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한 가지는 이념적 반미정서이고 하나는 감정적 반미주의이다. 이념적 반미정서가 미국 정부나 사회에 대해 좀 더 이성적인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감정적 반미주의는 미국의 특정 정책이나 미국과 관련된 사건에서 얻은 감정적 혐오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

다. 김지웅 교수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인 반미주의를 갖고 있으며 소수가 이념적 반미정서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2002년과 2008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은 미국에 어떠한 이념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거나 입장을 취할 의도가 없던 일반 대중들에게 내재되어 있던 감정적 반미주의를 자극한 것이다. 반미시위의 규모가 매우 컸었기 때문에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상당했다. 성급한 단순화일지 모르나, 미군전차에 사망한 여중생을 기리는 촛불시위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졌던 반미주의가 궁극적으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승리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2008년 초 3개월 동안 이어진 미국 소고기 반대 시위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출범한지 채 몇 달이 되지 않아 그의 정책 자문 및 내각 의원들을 교체했다. 이 사건은 감정적으로 동원된 대규모 반미주의가 한국 국내정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우리는 위의 사건들과 대조되는 사건을 2012년 총선에서 발견할 수 있다. 위에 언급했듯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항하여 전략적 선거 연합을 구성하고 양당 간의 단일 후보를 뽑아 각 지역구에서 경쟁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은 여러 명의 야당의원들에게 표가 갈려 여당전제를 실패했던 과거의 선거 경험을 통해 세워졌다. 그들은 선거공학적 계산에 의해 세워진 전략과 함께, 반미정서로 촉발되었던 대규모 시위의 정치적 결과도 기억하고 있다. 지역구에서 야권단일정당이 여당에 앞서기 위해서 민주통합당은 규모가 훨씬 작은 통합민주당에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선거를 위한 정책패키지 구성에 있어 많은 것을 양보해야 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이슈는 민주통합당 한미 FTA와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정책 결정을 뒤집어 야만 했던 것이다. 한미 FTA와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은 모두 노무현 정권 때 추진되었던 정책이다. 과거의 자신들의 정책 결정을 뒤엎는 행위는 보다 뿌리 깊은 반미정서를 갖고 있는 핵심 야당 유권자들에게 더욱 어필했을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핵심 유권자들 간의 단합과 당내에서의 정당지도자들의 기반 공고화였다면, 이것은 옳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연합은 대중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으며, 선거에서 원하는 기대를 실현시키지 못했다.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한국 유권자의 선택 1: 2012총선』(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2), p. 230.

〈그림 4〉 한미 FTA는 추진되어야 하는가?

〈표 1〉 지역구 투표 의향 및 지지정당에 따른 한미 FTA 추진

(단위: %)

	지역구 투표 의향에 따른 한미 FTA 추진		지지정당에 따른 한미 FTA 추진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새누리당	85.7	8.4	85.6	
민주통합당	39.5	47.7	44	44.6
통합진보당	34.8	59	27.3	62.3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한국 유권자의 선택 1: 2012총선』(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2), p. 230.

2012년 총선 기간의 여론조사를 보면, 위에 언급한 사건들은 대중들을 선동시킬 수 없는 이슈였다. 먼저 한미 FTA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5%가 “한미 FTA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했고, 29.1%는 “한미 FTA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 총선 지역구 투표의향에 따른 의견분포를 살펴보면, 새누리당 후보에 투표할 의향이 있었던 85.7%는 한미 FTA추진을 동의했고, 8.4%가 한미 FTA 폐기 주장에 공감했다. 민주통합당 후보에 투표할 의향이 있었던 유권자 중에서는 39.5%가 한미 FTA 추진에 동의했고, 47.7%가 한미 FTA 폐기를 지지했다. 한미 FTA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통합진보당 후보에 투표할 의향이 있었던 유권자 중에서는 34.8%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봤고, 59%는 폐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보면 총선 전 야권에서 제기된 한미 FTA 폐기 이슈는 야권 내에서도 강한

〈표 2〉 대북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

(단위: %)

	대화와 설득	북한의 선제적 변화 필요
진보	62.9%	34.9%
보수	42.9%	55.2%
새누리	38%	58.8%
민주통합당		34.6%
통합진보당		18.2%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한국 유권자의 선택1: 2012총선』(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2), pp. 231-232.

호응을 얻고 있지 않았다. 한미 FTA 폐기에 대한 가장 적극적 지지층은 학생으로 44.9%가 폐기를 지지한다고 밝히며, 화이트칼라(38.3%)보다 폐기 주장을 더 지지하고 있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의 85.6%가 추진에 동의하고 있었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지지자는 한미 FTA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비율이 각각 44.6%, 62.3%로 나타났다. 이렇듯 지지정당에 따라 보더라도, 한미 FTA 이슈는 진보세력이나 야권을 통합하는 이슈가 되기 어려웠다(추진 vs. 폐기, 민주통합당: 44% vs. 44.6%, 통합진보당: 27.3% vs. 62.3%). 세대별로 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야권의 한미 FTA 폐기론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20~30대에서만 폐기론을 지지하는 비율이 각각 43%, 45.1%로 나타났다.

다음은 지난 총선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 국내 선거에서 중요하게 여겨져 왔던 대북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를 살펴봤다. 지난 총선에서 대북이슈는 선거 막바지에 북한의 로켓 발사와 맞물리며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투표일 직전에 북한의 로켓 발사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보수층을 결집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대북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지원 및 대화와 설득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와 “북한이 변화하기 이전에는 경제적 지원을 재개하면 안 된다”는 의견 중에 어느 쪽에 보다 동의하는지를 물어 살펴봤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대화와 설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3.2% 북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4%로 나타났다.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은 세대별로 나뉘지는 않았고, 오히려 20대의 보수적인 특성이 발견되었다. 북한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지원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20대에서 55.1%였는데, 이는 60대 이상의 51.7%보다 더 높은 수치였다. 나머지 세대의 경우에는 다른 이슈에서 다소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일관된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30~50대는 대화와 설득을 지지하는 의견이 각각 43%, 61.2%, 59%였고, 20대는 43%, 60대는 43.2%가 대화와 설득을 향후 대북정책 방향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의 62.9%가 대화와 설득을 선호했고, 34.9%가 북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에 보수는 42.9%가 대화와 설득을 선호했고, 55.2%가 북한의 변화가 없으면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그 동안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에서 목격된 극단적인 입장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지정당에 따라서도 새누리당 지지자의 38%는 대화와 설득을 지지했지만, 58.8%는 북한의 변화 이전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지지자의 34.6%, 18.2%는 북한의 변화 이전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과거 선거에서 나타났던 대북정책에 대한 정파적 태도의 격차는 통합진보당에서만 나타났다. 한미 FTA 논란은 지역구와 정당 투표 모두에서 새누리당 후보나 새누리당에 투표한 응답자의 86.4%, 87.8%가 한미 FTA 추진을 찬성했고, 새누리당 후보나 새누리당에 투표한 유권자 중에서 폐기를 주장한 야권의 입장에 동조한 비율은 각각 8.9%, 7.1%에 불과했다(우정엽·강충구, 2013).

이와 대조적으로 야권후보나 야당에 투표한 응답자의 지역구, 정당 투표 모두에서 한미 FTA에 대한 찬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과 같은 야당의 후보들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은 지난 총선에서 한미 FTA나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여 특정 후보자나 당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이나 새누리당의 후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복지정책과 한미 FTA 사안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투영하여 특정 후보를 뽑았을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이나 새누리당 후보를 뽑은 극히 일부의 응답자만이 한미 FTA나 복지정책 사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통합 야당의 선거 운

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분명히, 2012년 총선 기간 동안 이러한 이슈가 크게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많은 이유가 있다. 여론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이러한 이슈들은 그들의 핵심 세력에게조차 크게 어필하지 못했다.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반미 정책 패키지의 영향력은 2002년 그리고 2008년 때의 사건들과 비교하여 매우 약했다. 더욱이, 야당이 조직한 운동에도 대중들이 모이지 않았다. 2012년 야당이 대중들에게 반미정서를 촉발시켜 여당의 지지도를 약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화 되지는 못했다. 증명하기가 어려운 문제지만, 이러한 사안들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예측은 가능하다. 김지웅(1989)과 김성한(2003)이 지적하였듯이, 감정적 반미주의인가 실용주의적 반미주의인가를 구별하는 핵심단어는 “감정”일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을 유인하는 야당의 능력이 이전에 비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야당이 2012년의 한미 FTA와 제주 해군 기지 사안에 대한 과거의 정책 결정을 집권시기에 반복하면서 대중에 대한 설득력을 잃었다.

2002년과 2008년의 사건을 재조명해 보면 스스로를 좌파나 반미세력으로 정의하지 않는 대중들이 특정 사건(미국 전차에 의해 압사 당한 여중생과 미군의 무죄 판결 사건과 미국 소고기 수입 승인)에 대한 대규모 시위나 촛불 시위에 참여하였다. 두 가지 사건에 경우 대중들이 보다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저자는 이 사건들이 대중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2002년과 2008년에 있었던 이 사건들의 경우, 대중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유리한 규제를 한국에 강요하는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느꼈다. 대중들은 미군들이 의도치 않았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여중생을 죽였기 때문에 한국 재판에 회부되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미국의 책임 있는 고위 관료가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건 직후 미군은 미군이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는 신중하지 못한 반응을 내 놓았다. 한국 사법부는 지방 법원에 두 명의 미군을 기소하였고 미군에게 이 사건에 대한 사법권을 포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미군은 주둔군 지위협정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미군 2명은 미

군 영내 군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무죄 선고 5일 뒤 한국을 떠났다. 대중은 한국이 여중생을 죽인 미군을 한국 재판에 회부하지 못하고, 결국 미군이 무죄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한국의 주권이 미국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대중들은 죽은 여중생들에게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고 그 주된 이유가 미국에 의해 한국의 주권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2008년 초, 한국과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소고기 수입을 허가한다는 위생 규정에 합의하였다. 이 규정은 소고기 뼈의 함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부위의 소고기와 30개월 이상의 소와 같은 특정 상품 수입을 허가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공업자들은 광우병 유발 위험이 있는 소고기 부위를 일일이 제거해야 했다. 과거에 미국소고기 수입 금지는 2003년 미국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어 시행되었다. 이후 2008년 4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캠프데이비드에 방문했고, 소고기 수입 금지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성급하게 소고기 수입 금지 정책을 해제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과 같이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 위해 미국 정부에게 검증되지 않은 이권을 넘겼다는 것이다. 대중들은 한국의 주권이 미국에 의해 짓밟혔으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이 담보되었다고 받아들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었던 것이다.

둘째로, 대중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 매우 복잡한 손익계산을 하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2002년과 2008년에 있었던 사건들은 이념적 또는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대중들의 감정적 반응을 일으켰다. 2002년의 일어났던 사건을 대중들은 몰상식하고 독단적인 미군에 의해 무고한 여중생이 죽음을 맞이한 비참한 사건으로 받아들였다. 이 소식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성향에 상관 없이 비통해 했다. 2008년의 사건은 국민들이 자신과 그들의 자식들이 당장 무엇을 먹을까에 관한 민감한 문제였다. 광우병에 의한 사망 소식이 보도되면서, 국민들은 식품안전에 대해 더욱 민감해졌다. 당시 대중들은 자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국가에게 화가 나 있었고, 한국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소고기 수입 반대 철회를 한국 정부에 압박하는 미국에 적대심이 생겼다. 국민들에게 식품 안전은 이념적 분쟁과는 무관한 문제였다.

대중들에게는 2012년 야당에서 이슈화시켰던 사건들이 문제의 본질이 이전 사건들과 달랐다. 대중들은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 사안이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올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다. 한미 FTA는 개인과 국가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냐의 문제였다. 민주통합당이 그들이 내린 이전의 정책을 뒤엎으면서, 이 사안은 진보와 보수 사이에 더 큰 논쟁거리가 되었다. 제주 해군 기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였으며 진보와 보수 사이에 이념적 논쟁이 될 수 있는 문제였다.

앞서 언급한 몇 차례의 반미시위가 일어난 후, 사건의 심각성을 직시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특히 미군은, 한국에서 미국 정부 또는 미군이 개입하는 사안에 있어서 국민정서 관리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2002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대응과 달리, 미국 기지 내에서 환경 문제가 발발했을 때 미군은 먼저 사과했고 사후 관리에 대한 약속을 했다. 미군 경찰이 한국 시민에게 수갑을 채우고 미군 영내로 끌고 갔을 때, 한국 정부와 미군 정부는 문제의 민감성을 인지했다.

V. 한미동맹과 미래의 역할

한미동맹은 한국전쟁 이후에 맺어졌다. 한미동맹이 상호간의 안보 협약이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안보 이익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대칭 동맹의 성격을 갖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오는 심각한 안보위협 때문에 한미동맹이 자주권을 양도하고 안보를 보장받는 교환적 성격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미국과의 동맹을 선택해야 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늘 안보 유지와 자치권 증대 사이에서 긴장감을 유지해왔다. 북한이 한반도에 영구한 안보 위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남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국민들은 한미동맹 유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안보 유지와 자치권 증대 사이에서 생기는 한미동맹의 긴장감은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가까운 미래에는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지만, 언젠가 미국과 한국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문제가 될 것이며 통일이 된다면 한미동맹 유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 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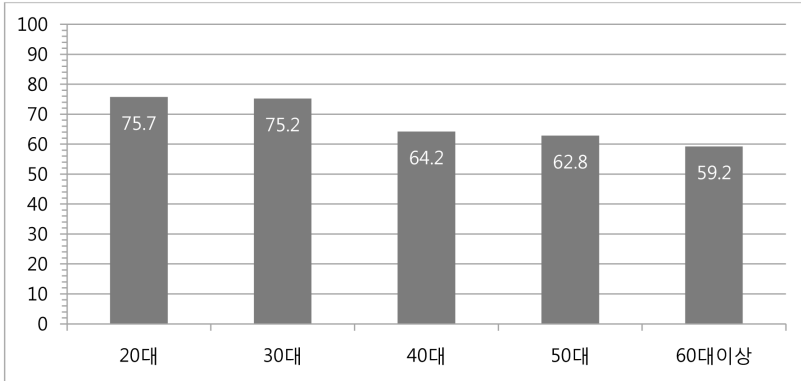
우리가 만약 한미동맹을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는 장치로 정의한다면, 통일 이후에 북한위협이 사라지고 나면 한미동맹 유지의 당위성도 약해 질 것이다. 여론 조사에서 보여지듯, 응답자들은 통일 이후에 한미동맹 유지에 대해 훨씬 낮은 지지도를 보인다. 응답자들이 현재 한국 안보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통일 이후에 한미동맹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2012년 9월경 한미동맹이 미래에도 필요한가라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94%는 그렇다고 답하였다.⁷ 20대 응답자의 96.3%, 50대 응답자의 97.3%, 60대 응답자의 94.7%가 미래에 한미동맹 유지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스스로를 진보라고 규정한 응답자들 중에서도 88%가 미래의 한미동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통일 이후에 한미동맹이 필요한가라고 질문을 바꿨을 때, 지지도는 10%가량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나이의 상관 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동맹 지지도가 10% 떨어졌다. 보수진영의 응답자들의 지지도는 97.8%에서 93.4%로 4.4%의 하락이 있었고, 진보진영에서는 88%에서 72.3%로 16%의 하락이 있었다.

2013년 9월 5일부터 7일까지 시행한 여론 조사 결과는 조금 다르다. 미래에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도는 조금 하락하였고, 89.6%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통일 이후에 한미동맹 지지도에 관한 설문 결과이다. 2013년 9월에는 단지 67.3%의 한국인들이 통일 이후에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젊은 계층의 응답자에 비해 기성세대의 응답자들이 통일 이후에 한미동맹의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 20대의 75.7%와 30대의 75.2%가 통일 이후에 한미동맹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고, 40대의 64.2%,

7. 아산정책연구원 “아산 연간조사 2012”, 미발간 자료(조사기간: 2012년 9월 1~24일).

(단위: %)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아산 연간 조사 2012” 미발간 자료.

〈그림 5〉 통일 이후에 한미동맹의 필요성(2013)

50대의 62.8% 그리고 60대의 59.2%의 응답자가 통일 이후에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60대의 22.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⁸

한국 국민들에게는 통일 이후의 한미동맹의 가치는 하락한다. 미국에서는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면 한미동맹은 퇴색될 것이라는 통념이 있었다. 하지만 2010년 시카고 카운슬에서 실시한 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은 한미동맹을 단순히 남한을 북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의미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80%의 미국인들은 한국과 북한이 통일을 한 이후에도,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렇게 답변한 미국인 중 43%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에 찬성했다. 오직 14%의 미국인들만이 통일 이후에 한미동맹을 해지해야 한다고 답했다(Chicago Council, 2010).

이 여론조사 결과가 놀라운 이유는 아직 일반 대중이 한미 동맹의 유지 필요성과 통일과의 연관성에 대해 많이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대답을 하였다는 점이다. 향후에 통일이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한미 동맹의 유지와 같은 우리 외교정책의 기본적인 방향 전환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논

8. 아산정책연구원 “아산 데일리 폴 2013”, 미발간 자료(조사기간: 2013년 9월 5~7일).

의가 격렬해 진다면, 일반 대중의 응답은 보다 더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에 더하여, 미국에서의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한미동맹을 중국을 겨냥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논의에 포함된다면 반미 정서와 더불어 더욱 격렬한 논의가 촉발될 것이다.

VI. 결론

논문 서두에 명시한 세 가지 요인만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국내 지지도 변동을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동맹에 대한 국내 지지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이유와 요인이 존재할 것이다. 다만, 이 논문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도와 국내정치 간의 상관관계이다. 앞서 보았듯이, 동맹에 대한 지지도는 국내정치 분위기와 매우 깊은 연관 관계가 있다.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은 당시 집권 엘리트 층의 대북 인식 및 그에 따른 대미국 인식이 일반 대중과 공유되면서 변화를 거듭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도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동시에, 국내 정치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미동맹을 이용하여 동맹에 대한 국내 지지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반미 정서를 촉발시키는 요소는 일반 대중이 정보 취득과 이해에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난이도 높은 정책 이슈라기보다는 즉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감정적 대응이 가능한 이슈들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매우 작게 보이는 이슈들에서 오히려 반미 감정이 불거지고, 그로 인해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한미동맹에 가치를 인지한다면 동맹에 대한 여론에 관심을 기울여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과거로부터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겉보기에 별 것 아닌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50년을 이어온 한미동맹을 붕괴시킬 수 있다. 또한, 미래에 다가올 한반도의 변화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다시 한미동맹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투고일자: 2015-08-08 심사일자: 2015-08-10 게재확정: 2015-08-26

참고문헌

- 김우상. 2004. 「미래 한미동맹의 구상과 정책제안」. 『정책연구』 통권 142호(봄/여름). pp. 67-108.
- 박경미·한정책·이지호. 2012.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구성적 특성」. 『한국정당학회보』 11권 3호 pp. 127-154.
- 이내영·정한울. 2003. 「반미여론과 한미동맹: 2002년 12월과 2003년 6월 여론조사 자료의 분석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9권 3호 pp. 57-82.
- 우정엽·강충구. 2012. 「선거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박찬욱·김지윤·우정엽(편). 『한국 유권자의 선택 1: 2012총선』.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pp. 220-253.
- 아산정책연구원. 2012. “아산 연간 조사 2012” 미발간 자료(조사기간: 2012년 9월 1~24 일).
- 아산정책연구원. 2013. “아산 데일리폴 2013” 미발간 자료(조사기간: 2013년 9월 7~9 일).
- 아산정책연구원. 2013. “아산 연간 조사 2013” 미발간 자료(조사기간: 2013년 9월 4~27 일).
- 조정인. 2011. 「Sources of Korean Public Attitudes toward the U.S. and the Impact of Anti-American Sentiment in Electoral Politics」. 『사회과학연구논총』 25권 0호 pp. 93-124.
- Kang, David. 2003. “The Avoidable Crisis in North Korea.” *Orbis*, 47(3): 495-510.
- Kim, Jinwung. 1989. “Recent Anti-Americanism in South Korea.” *Asian Survey*, 29(8): 749-763.
- Kim, Sung-han. 2003. “Anti-American Sentiment and the ROK-U.S. Allianc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15(2): 105-130.
- Snyder, Scott. 2004.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e U.S.-ROK Alliance?” *PacNet*, No.36, August 26.
- The Chicago Council. 2012. “Working Paper on the U.S.-ROK Alliance.” October 15.
- The Chicago Council. 2010. “Constrained Internationalism Adapting to New Realities.” September 16.

A Study on South Koreans' Support Transition towards the ROK-US Alliance

Jung-Yeop Woo

Research Fellow,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Sungwon Lee

Research Associate,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maintained their neighborly relations for over 60 years since the foundations of the alliance during the Korean War. Inevitably, the enduring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survived a number of minor and major crises and difficulties. This thesis first examines the root cause of these past tensions in the history of their alliance. Specifically, among the many variables that may exist that might weaken the relationship, the thesis focuses on the influence of the Korean public opinion. The study looks 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llective public sentiment towards the U.S. and the degree of support for the alliance. In recent years, the influence of public opinion on domestic and foreign policy h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fact, it is not difficult to find examples where the public opinion has defined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thesis will thus observe the public sentiment in ROK towards the alliance and its influence on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through examining public opinion polls during selective incidents in recent history related to the alliance. It will further examine how the issues related to the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shapes the outcomes of impending national elections. It is important to note in this thesi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support for the ROK-U.S alliance and the Korean politics. As previously shown, the degree of support for the alliance has a very in-depth relationship with the domestic political climate. To an extent, it can be managed and manipulated on the domestic level. In other words, politicians can easily use the rhetoric of ROK-US relationship as a political tool to their advantage. As such, in order for the South Korean and the U.S. government to fully enjoy the benefits of their alliance, it is important to closely follow and maneuver through the public opinion towards the relationship.

Keywords: ROK-U.S. alliance, security, anti-U.S. sentiments, unification, U.S Armed Forces Korea (USFK)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110-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 1가길 11
E-mail_woo@asaninst.org

이성원. 아산정책연구원
110-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 1가길 11
E-mail_sungwon@asaninst.org

